

“도민 밀착형 정책 행사 잇따라 개최” 내란 종식·민생 회복 결의

도, 9월 첫 주 주요 일정 발표… 금융지원·문화 계승·AI 산업 등 현안 집중 논의

전북특별자치도가 9월 첫 주(1~5일) 도민 생활과 직결된 각종 정책 행사를 연이어 개최한다고 지난달 29일 오전 발표했다.

김철태 도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다음 주는 전통문화 계승부터 첨단산업 육성까지 다양한 분야의 현안들이 집중 논의된다”며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도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9월 1일에는 무형유산 보유자 간담회(오전 10시)와 전북 천년명가 협의회 발대식(오후 3시) 등 전통문화 계승 행사가 열린다.

특히 30년 이상 같은 업종을 이어온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전북 천년명가 제도는 현재 도내 58개 업체가 지정돼 경영 지원금과 마케팅 지원을 받고 있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복합 지원 업무협약이 체결된다.



김철태 전북특별자치도 대변인이 지난달 29일, 도청 기자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9월 1~5일 전북자치도 주요 일정을 발표하고 있다.

9월 2일에는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오후 2시)와 함께 우수 학생 장학금 지원을 위한 미래동행 장학사업 협약식이 열린다.

이번 협약으로 도내 예·체능·과학·어학 분야 우수 초·중·고생 50명이 1인당 100만원씩 총 5,000만원의 장학금을 받게 된다.

주목할 만한 일정은 9월 3일, 김민석 국무총리의 새만금 방문이다.

김 총리는 새만금 주요 사업 현장을 시찰하고 관계기관과 비공개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도는 총리 방문 이후 별도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논의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월 4일에는 전북의 AI 산업 육성 종합계획이 발표된다. 이번 계획은 단순 물리적 AI에 국한하지 않고 산업·행정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9월 5일에는 환경부 장관이 참석하는 자원순환의 날 기념행사가 김제에서 열리며, 같은 날 저녁에는 무주 반딧불 축제 개막식도 예정돼 있다.

이 밖에도 하계올림픽 유치 관련 중간 보고회, 무인 이동체 기본계획 수립 등의 업무도 병행 추진된다.

김철태 대변인은 “도민 눈높이에서 현안을 공유하고 정책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도정의 책무”라며 “열린 도정을 통해 도민 신뢰에 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이 대통령 “여야 관계 잘 만들어야”… 민주 “석세스메이커 될 것”

청와대 영빈관서

여당 초청 오찬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단 초청 오찬에서 “국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국회에서 개혁 과제를 잘 추진해주시리라 믿는다”고 했다. 또 “민주당이 다수당인 만큼 야당과 서로 협력해서 일을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청와대 영빈관으로 민주당 의원들을 초청해 약 1시간 30분 동안 오찬을 함께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찬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대통령이 ‘국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말보다는 행동과 결과가 앞서는 국정을 운영해보고자 하는데 국회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인사말을 했다”며 “그 말씀 안에는 여야 관계를 잘 만들어 가라는 당부가 함께 담겨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오찬 참석자는 “우리가 다수당이기에 때문에 일을 처리하다가 잘못되거나 어려워지면 국민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했다”며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자만, 교만하면 안 되고 서로 협력해서 일을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다른 한 참석자도 “대통령이 검찰개혁뿐 아니라 여러 현안들에 있어서 여야가 합의해 일을 잘 처리할 것이라고 보는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여당 의원에게 몇 가지 당부도 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저에게는 지금보다 임기가 끝나는 날의 평가가 제일 중요하다. 말만 많이 하는 것보다 결과를 보여드리고자 한다”며 “말보다는 행동과 결과가 앞서는 국정을 운영해보고자 한다. 국회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 목소리를 작은 하소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청와대 영빈관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정청래 대표 “민생·개혁 고삐 질 것… 원팀정신 절실”

박지원 “정치 살려야”… 백승아 “李 정부 성공 목표”

까지도 들어드리고 소통하는 것이 설사 그 목소리에 다 응답할 수 없다 하더라도 매우 중요하다. 지역구를 다니면서 많은 국민을 만나달라”며 “국회 의원, 단체장, 지방의원들에 대한 평가가 좋으면 결국 국정에 대한 평가도 좋아지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제 말씀 한마디에 수천 만 국민의 삶이 달려있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죽을 힘을 다해 국정에 임하고 있다”며 “의원 여러분께도 지금이 역사 변곡점이라 인식하고 한 분, 한 분 책임이 정말 크다는 생각으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도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오랜만에 친정인 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전우들을 만난 것 같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청래 대표는 이 대통령이 3박 6일 간 일본·미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점을 언급하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진정한 외교가 무엇인지 여실히 보여주셨고 이재명표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어 “상대국에 대한 치밀한 분석, 철저한 준비, 세심한 배려가 어우러져 성공을 이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럽다”며 “대통령의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발언은 이번 회담의 성과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이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28~29일 진행된 의원 워크숍을 거론하며 “이번 정기국회의 목표는 민생·개혁의 고삐를 단단히 죄는 것과 국민께서 명령하신 시대적 개혁 과제들을 반드시 완수하는 것이다. 생활 속 변화를 가져올 민생 법안을 통과시켜 국민의 눈물 닦아드리겠다”고 했다.

당정 원팀 정신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지금은 원팀 정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당정이 한몸 공동체로서 끝까지 함께 뛰어 국민이 바라는 성과를 반드시 만들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오찬 자리에는 박지원·백승아·전용기·추미애 등 선수, 나이를 고려해 지명된 의원들의 발언도 이어졌다고 한다. 이들은 이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성과를 치하했다고 한다.

박지원 의원은 “이 대통령의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발언은 외교의 백미다. 트러블메이커(troublemaker·말썽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편해지지만, 대통령은 트러블메이커를 만나는 등 정치를 살려달라”고 말했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전했다.

백승아 의원에 오찬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오찬에서) 저희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석세스 메이커(success maker·성공을 만드는 사람)’가 되겠다 했다”고 말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에 대비한 1박2일 의원 워크숍에서 내란 종식과 민생 경제 회복, 민생개혁 입법 관철, 사회 대개혁 완수 등을 결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을 마무리하면서 이같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위대한 우리 국민은 12·3 내란사태를 맨몸으로 막아냈다. 그리고, 정권교체의 열망으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를 탄생시켰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는 빛의 혁명과 이재명정부의 출범을 자랑스럽게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지금 역사적 갈림길 위에 서 있다. 지난 3년 유린당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집권여당이자 원내 제1당이라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무장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 하겠다”며 “12·3 내란사태를 완전히 종식하고, 벼랑 끝에 선 민생경제를 살려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갈등과 대립을 넘어 통합과

화합의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 나라 안팎의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강국 대한민국을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2025년 정기국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회복과 개혁, 성장의 초석을 다지겠다”며 “검찰개혁, 사법 개혁, 언론자유, 한반도 평화, 정의와 공정, 민생경제가 살아 숨 쉬는 희망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정부가 성공해야, 대한민국과 국민이 성공한다. 주권자 국민이 모두 함께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한창게 전진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우리는 주권자 국민과 함께, 12.3내란을 완전히 끝내고, 일치단결 전력투구로 민생경제를 회복한다”며 “우리는 주권자 국민과 함께, 과감한 민생개혁 입법을 관철하고, 사회 대개혁을 완수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주권자 국민과 함께, 국가적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강국 대한민국으로 다시 도약한다”며 “우리는 주권자 국민을 위해, 이재명정부와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 살신성인의 각오로 헌신한다”고 했다. /뉴시스

“건설업 사망사고 예방, 비상한 각오로”

김문덕 국토부장관, 오송지선 공사 현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

전북 출신인 김문덕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난달 29일 오전 세종 29천 고속도로 오송지선 건설공사 현장(세종 전동면)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같은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건설안전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세종 포천 고속도로 오송지선은 세종 전동면에서 청주 오송신도시까지 6.21km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2026년 12월 개통할 예정이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결과가 발표(8월 19일)된 세종 안성 고속도로 청용천교 붕괴사고(2월 25일)와 같이 교량공사에 걸쳐장비를 사용하는 현장이다.

현장을 찾은 김 장관은 런처 작업절차와 안전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지난 2월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사고 사례를 토대로 세부 작업절차와 기준 위반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공사 시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라며, “발주청과 시공사뿐만 아니라, 현장 근로

자들도 사고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오후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건설안전 현안 간담회를 주재해 건설안전 제고를 위한 발주청과 시공·설계·감리업계의 역할과 다양한 건설주체의 안전관리 책무를 규정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등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대한건축사협회, 건설안전 학계 전문가인 충북대학교 원정훈 교수 등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 건설업 사고사망단위율이 OECD 주요국의 2배가 넘고, 산업재해 사망자의 약 40%가 건설업에서 나온다는 데에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정부가 필수직성의 각오로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안전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다질테니, 업계도 그 위에 바로 서 책임을 다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권희성 기자

“보좌관 집행유예 형 선고, 윤 정권 검찰 억지 기소”

신영대 의원 “법적 대응 이어갈 것”… 현재 심리 진행 중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군산·김제·부안갑)이 과거 선거캠프 사무장이었던 강보씨의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신 의원은 이번 사건이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정치적 억지 기소”에서 비롯됐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강씨는 신 의원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조작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신 의원은 “문제가 된 행위는 강씨가 사무장으로 공식 선임되기 이전에 발생한 일”이라며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과잉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사무장이나 회계 책임자, 보좌관이 징역형이나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씨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신 의원은 자동으로 의원직을 잃게 된다.

신 의원은 이에 맞서 공직선거법 제265조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해 심리 중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선거 사무장 선임 전 행위’를 의원직 상실로 연결한 공직선거법 제265조는 만들어진 지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적용된 적 없는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으로 죽은 법을 억지로 쓴 것 자체가 정치 기소이자 억지 기소의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이를 권한 심판 대상으로 채택해 심리를 진행 중이다.

신 의원은 “사무장 개인의 범죄를 이유로 당사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은 국민의 선택을 부정하는 위헌적 제도”라고 강조했다.

정지권은 이번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강 씨의 형이 확정된다면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군산시·김제시·부안갑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신 의원은 끝까지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만호 기자

민주 개혁 5당 합의 ‘반헌법특위’ 법안 국회 제출

조국혁신당이 지난달 29일 반(反)헌법 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위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조사권과 수사 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김진민 조국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과 차규근·이해민 최고위원, 정춘생 정책위의장, 신장식 원내수석부대표, 백선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헌법행위조사특별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발했다.

이들은 “80년 전 우리에게선 친일 매국노를 뿌리 뽑을 기회가 있었다.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제대로 활동했다면 일제 앞잡이, 밀정, 매국노를 모두 골라냈을 것”이라며 “그러나 반민특위는 좌초했고 일제 잔당은 국유와 손잡고 민주민족 세력을 탄압했으며 친일 매국 세력은 분단의 아픔에 기승해 기득권을 유지했다”고 했다.

이어 “이들의 후예가 내란 세력”이라며 “내란 우두머리와 부화 종사자들은 심판대 위에 올랐고 세 특검이 열

심히 수사하고 있지만 이 노력만으로 역부족이다. 수사할 내용은 방대하지만, 수사 시한과 인력은 달린다”고 말했다.

또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영장 기각 결정 등은 내란 진상규명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준다”며 “내란 세력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으로 결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제2의 반민특위’가 설치될 것이다. 반헌특위는 내란의 진실을 낱알이 밝히고 방통위, 인권위 등 기관과 인

사의 내란 연루 의혹을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지난 대선 때 민주 개혁 5당은 ‘반헌특위’ 설치에 합의했다. 여야 모두 ‘반헌특위법’을 찬성해달라”며 “국민의힘에서도 내란세력을 정리하고 새로운 보수를 정립하고자 하는 인사들이라면 저희와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뉴시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